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2. 14.(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프랑스 인구·가족, 연금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 면담 및 협력방안 논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누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피,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에게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주면서 결혼 대신 법적 보호와 혜택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제도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박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방문기관 개요

담당 부서 <총괄>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장	이현주 (044-202-2360)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044-202-2351)
연금제도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창규 (044-202-36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2-3613)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사무관	임성필 (044-202-3367)



1. 국립노령보험금고(Caisse Nationale d' Assurance Vieillesse, CNAV)

- (설립연도) 1967년
- (조직)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1,500만명 이상 15개 지역 연금제도 등을 관리하는 전국 단위 조직(=국민연금공단)
- (주요 역할) 민간 근로자, 자영업자, 계약직 근로자, 예술가·작가, 철도, 전기·가스사산업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적 연금서비스 관리**
 - (제도 운영) 일드 프랑스(ile-de-France) 지역 보험, 15개 지역보험, 산업보건 보험, 4개 해외영토(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기아나) 사회보장기금 등 관리
 - * 파리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반경 100km 지역
 - (서비스 제공) 1,500만명 이상의 퇴직자에 대한 정보 관리, 노후생활 컨설팅, 연금지급 관련 서비스 등 제공

2.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famille, de l'enfance et de l'âge, HCFEA)

- (설립연도) 2016년
- (역할)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2016. 12. 13. 설립되어 가족, 아동, 노인 및 은퇴자 관련 주요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권고안 제공
 - 제안한 의견, 권고의 입안·실행을 위해 부처 장관 및 담당자 회의, 관련 단체(기관장) 협력 등을 통해 제안사항의 공감 확대 노력
- (구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민간단체·협회, 노조, 국회의원, 기타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약 240여명의 남녀 동수로 구성
 - 전체 회의 외에 영역별로 ①가족위원회, ②아동·청소년위원회, ③고령화 위원회의 3개 위원회로 세분화
- (주요활동) 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위원회, 고령화위원회 별로 현안 및 주요 의제 논의 및 제안

3.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INED)

- (설립연도) 1945년
- (설립배경) 프랑스는 20세기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 인구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
- (조직) 이사회·연구소장 이하 11개의 연구단위*로 구성
 - * ①출산, 가족부부, ②성·성정체성 불평등, ③사망률, 건강, 의학, ④주거, 이동성, ⑤이주, 소수집단, ⑥경제인구통계, ⑦인구역사, ⑧집단정체성, ⑨남부지역 인구, ⑩타기관 연계, ⑪성·재생산
- 주요 역할
 - (연구) 출생·사망·이주 등 인구 변동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
 - (자문) 정부의 출산율 향상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제공
 - (데이터 수집·분석) 인구 통계 수집, 분석 및 동향보고서 작성
 - (인구정보 제공) 국민 대상으로 인구통계·추세 등에 대한 정보를 프랑스어, 영어 버전으로 제공

4. 연금전략위원회(Conseil d' Orientation des Retraites, COR)

- (설립연도) 2000년
- (조직) 프랑스 총리실 산하
 - (위원) 국회,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41명으로 구성
 - (사무국) 위원회 산하에 상임 사무국 운영
- (주요 역할) 연금제도 전반의 장기적 전망을 예측하고,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정부 자문 위원회(≒우리나라 재정계산위원회)
 - (재정 전망) 인구구조(기대수명·고령화), 거시경제(경제성장·실업률 등), 사회 변화 등을 바탕으로 미래 재정 시나리오 예측
 - (정책 제안) 연금개혁의 효과 및 타당성* 분석, 정부 및 의회에 연금제도 발전 방향과 관련된 정책 조언 제공
 - (보고서 발행) 매년 6.15일 전에 연례 보고서(public document) 발간